

농촌 과소화 실태와 전망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d Prospect for a Diminishing in Population of Rural Community

이병기*

Byung Ki Lee

Abstract

Recent years, being advanced the phenomena of fewness and aging rapidly in rural areas, rural community has been collapsed fastly. This study is aimed for two intentions: the one is identification of the actual conditions of rural diminishing in population, and the other is having a view of real picture of it in future.

The major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the rural area's shrinking for a long time advanced, the rural community has grown to under the minimum autogenesis level. Futher more this study have a look out in ten years later that rural community will diminish in population to 42% size compared with now, and the number of elder than 80 years old occupy a half of total population in a standard case.

Such a consequence of this study implies no doubt tha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must lay a stress to cope with a serious situation of rural scantiness. And policy conversion calls for having a new understanding of this situation first.

주요어(key words): 과소화 및 노령화(the phenomena of fewness and aging), 농촌공동화(rural scantiness), 농촌지역사회(rural community)

* 협성대학교 도시지역학부 교수. e-mail: bkleee@uhs.ac.kr

1. 서론

그동안 누적된 농촌인구의 과도한 탈농촌 러시로 농촌지역은 공동화되고 고령화되어 활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그 와중에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또한 지속적이고 악화되어온 나머지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위축되기에 이르고 있다.

농촌지역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여 최근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 노력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촌정책은 이렇듯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농촌정주공간의 변화 실태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기초위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예컨대, 자원과 경영능력을 갖춘 몇몇 지역에서나 가능할 법한 농촌관광 성공사례를 모든 농촌지역의 발전 모델로 제시하면서 많은 관련 정책프로그램들이 분별없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농촌정책의 한 단면이다. 또 농촌정주체계가 근본적으로 상향 편중되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정작 농촌정책은 정주공간으로서의 주된 기능을 상실한 과소화된 마을에 관심을 집중하면서 이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정주기능 지원 프로그램을 다수 적용하고 있다.

농촌정주공간의 역할과 기능이 구조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서 오는 비효율성이 자못 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보다 심도있는 농촌현실 인식이 정책적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최근 농촌의 어려움을 배경으로 농촌개발 관련 연구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는 하나, 대개 구체적인 농촌정책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그 성과와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미시적 수준의 연구 경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정주권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윤원근 외, 2005),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방안(송미령 외, 2006),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효과 분석(박운호 외, 2008), 국토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중심지 발전방안(성주인, 2008) 등 최근 수행된 관련 연구들에서 농촌정책 프로그램 지향의 미시적인 연구경향을 뚜렷이 읽을 수 있다. 농촌지역의 급격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자리매김 되어야 할 농촌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제쳐둔 채 현상적이고 지엽적인 개발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무엇보다 농촌정책의 배경이자 그 기반이 되는 농촌의 과소화 현실에 대한 연구관심이 부족함을 말해주고 있다. 농촌의 과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 모습과 성격 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 다소 소홀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농촌문제의 근본 원인이 궁극적으로 농촌인구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위축되는 데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면, 농촌정책의 관심은 1차적으로 농촌과소화의 실상과 전개 모습을 이해하는 데에 두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연구들에서 나뉘대로 이러한 농촌정주여건 변화 실태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하고 있다.¹⁾ 한편 이들 연구들은 여러 가지 한계를 보이는데, 분석기간이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횡단면 분석이거나 또는 최근의 두 시점만 기준으로 인구기반 실태와 변화를 보고 있다는 것이 그 하나이다. 또한 전국 읍·면 전수를 대상으로 인구규모 변화와 노령

1) 윤원근 외(2005)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논의 과정에서 2000년 센서스자료를 기초로 전국 면을 인구규모 기준으로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그 당시 면단위 인구규모 실태를 제시하고 있다. 즉, 2,500명 미만을 소규모 면, 2,500~5,000명 사이의 면을 평균 면, 5,000~10,000명 해당 면을 대 면, 그리고 10,000명 이상 면을 거대 면으로 구분하였음. 분석결과 2000년에 총 면수는 1,217 개소로 나타나며, 이 중 각 유형별로는 차례대로 각각 26.4%, 44.7%, 22.4%,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주인외(2008)는 농촌중심지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1990~2005년 기간 중 전국 읍·면별 인구증감율을 분석하여 평균치와 함께 상대적인 증감 정도를 도면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또 동기간 중 전국 읍·면을 대상으로 고령인구비율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노령화 진행정도를 역시 도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화 등 관심 지표의 상대적인 변화 모습을 분석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긴 시간 진행되어온 인구과소화 변화 추세의 정확한 모습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농촌정주기반을 이루는 농촌마을의 인구과소화 실태와 변화 모습은 읽을 수 없다는 것도 한계다. 나아가 이들 연구에서는 농촌정책 논의의 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의 하나인 농촌마을의 존재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농촌마을의 인구과소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인구전망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그리고 전국 읍·면을 대상으로 비교분석을 하다 보니 지표별로 상대적인 차이를 기준으로 몇 개 급간을 구분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분된 급간 수 범위 내에서 변화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보니, 구분된 급간 속에 매몰되어 있는 그대로의 극적인 큰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변화의 실제 모습을 알려주는 절대적 수준의 읽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농촌 과소화 실태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면서 동시에 그 심각성 정도와 특징을 짚어보고, 나아가 향후 전개될 농촌과소화 실제 모습 또한 전망해 보고자 한다. 농촌공동화 우려가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농촌인구 기반의 실제 변화 모습에 대한 관심이 높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문제의 근간인 농촌과소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그 시사점을 읽어보고자 한다. 농촌문제의 본질이 인구 과소화 및 노령화로 시장이 위축되고, 붕괴되는데서 비롯되는 즉,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데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농촌과소화 문제가 농촌정책의 핵심 배경이자 대상이므로, 농촌과소화 실태 논의에서 농촌정책의 시사점이 자연스레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을 이루는 농촌과소화 실제 모습은 기본적으로 사

례지역 중심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전형적인 농촌 사례지역이 통계치에 의한 평균값보다 보다 사실적으로 실제 과소화 모습을 재구성해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례지역은 군지역 단위를 기준으로 입지유형별로 선정하도록 한다. 가급적 지역유형에 따른 편기 없이 일반적인 농촌 과소화 실제모습을 읽고자 함이다. 여기서는 입지유형을 대도시권농촌지역과 일반농촌지역으로 나누고, 그리고 일반농촌지역은 다시 평야농촌지역, 산간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2. 농촌 과소화 실태와 특징

2.1. 농촌 과소화 실태

농촌문제는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는 그 지역의 시장구매력 저하로 이어지고, 이러한 시장의 축소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으로 하여금 입지 임계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신규 입지를 제약하거나 기존 중심시설의 퇴출을 야기함으로써 정주기반을 허약하게 만든다. 농촌인구의 노령화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시장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젊은 연령층에 비해 소비욕구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 더하여 노령층의 경우 서비스수요의 폭 또한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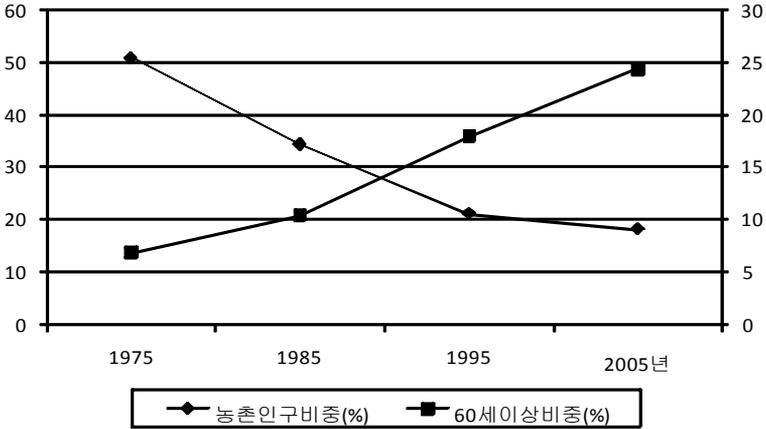
농촌의 위축은 결국 농촌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시장 활력의 저하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다. 농촌주민들의 정주공간인 농촌마을은 물론이고, 이들 농촌지역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공급하는 농촌중심지들 또한 동반하여 위축되면서 농촌의 활력이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우리 농촌은 빠른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농촌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이와 함께 젊은 계층 중심으로 농촌인구의 선별적인 유출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이렇듯 빠르고 큰 폭으로 진행되어온 이촌향도의 선별적 농촌인구 유출 현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농촌지역은 삶의 터전으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크게 훼손되기에 이르렀다. 농촌인구가 급감하면서 지역공동체가 해체되고, 더해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 농촌은 삶의 터전으로서 그 기반이 거의 무너져 내리다시피하고 있는 지경에까지 다다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농촌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 이러한 인구기반이 무너지고 노령화되는 농촌과소화 현상을 잘 읽을 수 있다. 1975년 농촌인구는 전체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1985년에는 34.3%, 1995년에는 21.1%, 그리고 최근인 2005년에는 18.0%로 그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60세 이상 농촌노인인구는 꾸준히 늘어나면서 농촌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975년의 경우 그 비중이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85년에는 10.5%, 1995년에는 18.0%, 그리고 2005년에는 24.4%로 큰 폭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체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농촌인구는 오히려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농촌 노인인구는 농촌인구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표 1).



〈그림 1〉 농촌인구 감소 및 노령화 추이

한편, 최근으로 오면서 농촌인구의 절대적 감소폭은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에 반해 노인인구 증가 폭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촌인구기반 위축 현상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적 현상으로 지적해 본다. 그동안 젊은 연령계층 중심의 농촌인구 유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나머지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여력이 없는 한계 선상에 이르고 있음과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해한다.

1975년부터 10년 단위로 농촌인구 감소율과 농촌인구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을 보면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다. 1975년에서 1985년에 이르는 10년간 농촌인구 감소율은 21.8%로 나타나며, 1985~1995년 기간 중에는 더 높은 수준인 32.1%의 감소율을 보이다가 최근 1995~2005년 기간 중에는 감소율이 7.9%로서 크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 노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5~1985년

기간과 1985~1995년 기간에 이르는 10년간 60세 이상 노인인구 증가율은 각각 19.8%, 16.4%로 나타나다가 최근 1995~2005년 기간 중에는 24.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1〉 연도별 농촌인구 변화 추이

구 분	1975	1985	1995	2005
총 인 구(천명)	35,281	40,806 (15.7%)	45,093 (10.5%)	48,294 (7.1%)
농촌인구(천명)	17,910	14,006 (-21.8%)	9,512 (-32.1%)	8,764 (-7.9%)
60세 이상 농촌인구(천명)	1,230	1,474 (19.8%)	1,715 (16.4%)	2,137 (24.6%)

주 1) 농촌인구는 군부인구이며, 2005년 경우는 읍, 면 인구임.

2) ()는 지난 10년간 증감율임.

3) 2005년 농촌인구는 내국인 기준이며, 65세 이상 인구수는 1,618천 명으로 나타남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2006농림업주요통계』, 2006; 통계청, 『인구 및 주택센서스』, 각년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멀지 않은 장래에 농촌지역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 공간으로 전락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가운데 또 다른 한편으로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인구 변화 패턴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기반을 허물어지면서 공동화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2.2. 농촌과소화 전개과정의 특성

2.2.1. 농촌과소화의 빠른 진행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농촌의 활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농촌마을의 공동체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나아가 농촌지역의 1차적 중심지 역할을 해오던 면 소재지의 기능이 대부분 급격히 와해되면서 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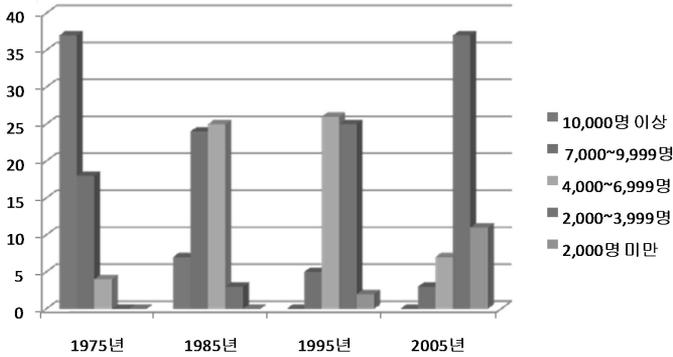
지역의 정주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과소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의 1차적 생활권을 구성하는 면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규모 변화를 관찰하였다. 관찰은 입지유형별로 몇 개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1975년부터 2005년까지 10개년을 간격으로 인구규모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사례지역은 도시근교지역으로 충남 금산군과 경북 성주군을, 일반농촌지역으로 전북 고창군과 김제시를, 그리고 원격산간지역으로 경북 영양군과 영덕군을 각각 선정하였다. 일반농촌지역의 과소화 실태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수도권 농촌지역은 사례지역 선정에서 배제하였다. 수도권 농촌지역의 경우 강한 서울의 개발압력 영향을 받는 관계로 여타 일반 농촌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분석결과를 보면 면지역이 빠르게 과소화되고 있음을 잘 읽을 수 있다. 1975년에만 하더라도 면지역의 대부분이 인구 10,000명을 상회하고 있으나 불과 10년 후인 1985년에는 그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시 그 10년 후인 1995년에는 사례지역들에서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인구 규모 4,000명 이하의 소규모 면은 1975년만 하더라도 아예 나타나지 않고 있었으나, 그 이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오늘날 최하위 정주공간단위인 면지역의 인구규모는 대부분 4,000명 이하로 축소되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으로 오면서 인구규모 2,000명 미만의 면들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인구 규모 4,000명 이하인 면의 경우 시장규모가 너무 적어 하나의 정주단위로서 활력을 유지하면서 존립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면소재지가 중심지로서 각종 생산 및 생활서비스 시설들의 입지에 필요한 최소수요치를 확보하지 못해 이들 기능들을 공급하기에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²⁾



〈그림 2〉 사례지역 면 인구규모 변화 추이

2.2.2. 농촌마을 해체 가속화

농촌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되는 가운데, 마을단위로 보면 과소화 현상이 한층 더 두드러진다. 현재 마땅히 마을단위 인구수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현 행정구역 중에서는 농촌마을에 보다 가까운 행정단위는 반(班)조직이다. 여기서는 반 단위 행정조직을 농촌마을을 대리하는 권역으로 간주하고 농촌인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1989년 이래 평균적으로 모든 마을의 인구수가 100명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사이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어 최근에는 대개 50명 선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북 영양군의 경우는 2008년에 평균 부락단위 인구가 39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분석단위인 1개 반(班) 조직에 수개의 자연부락이 포함

2) 실제로 인구규모 4,000명 이하 면의 경우 대체로 활력이 극도로 저하된 나머지 면소재지가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반면 아직도 인구규모 7,000명을 상회하는 극히 일부의 면소재지의 경우는 여전히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심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9).

되어 있다고 보면 본 분석결과는 농촌마을의 붕괴 정도가 훨씬 심각한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한편 농촌마을의 인구가 이렇듯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그렇다고 마을이 아직 소멸한 경우는 보이지 않다. 현재까지 반수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러한 사실을 짐작한다.

〈표 2〉 농촌마을의 인구수 변화 추이

사례지역		1989년	1999년	2008년
도시 근교	금산군	반수	1,089개소	1,112
		평균인구	77명	59
	성주군	반수	785개소	791
		평균인구	72명	67
월격 산간	영양군	반수	499개소	483
		평균인구	80명	49
	영덕군	반수	907개소	881
		평균인구	79명	60

주 1) 금산군 2008년 자료는 2004.12.31 기준 자료임.

2) 전라북도에서는 행정리 단위 이하 인구통계를 작성하지 않고 있음.

2.2.3. 고령화 현상의 빠른 진행

농촌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높아지는 고령화 구조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 현상의 실상을 확인하기 위해 여기서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노령화지수를 분석하였다.³⁾

분석결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75년 10% 내외에 불과하던 노령화 지수가 불과 30년만인 2005년에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인 무려 200% 내외 수준으로 나타

3) 노령화지수는 14세 미만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퍼센티지로 나타낸 값을 의미하며, 그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즉, '노령화 지수=(14세 미만 인구수 / 65세 이상 인구수) × 100'이 그것이다.

나고 있다. 1975년 65세 이상 인구가 14세 이하 인구의 10% 내외이던 것이 2005년에는 오히려 노인인구가 더 많아져 14세 이하 아동 계층 인구의 2배 내외에 이른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노령화 진행 속도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이 또 하나의 노령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사례지역의 노령화 지수는 70~90% 수준이던 것이 2005년에는 150~250%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불과 최근 10년 사이에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표 3〉 사례지역 노령화 지수

사례지역		1975년	1985년	1995년	2005년
도시 근교	금산군	10.2	21.9	71.3	155.3
	성주군	13.9	34.4	86.2	183.8
일반 평야	김제시	11.2	23.3	72.2	154.4
	고창군	10.3	20.8	74.2	186.2
원격 산간	영양군	8.8	21.5	90.9	261.0
	영덕군	11.8	20.3	94.4	219.0

3. 농촌 과소화 전망

3.1. 농촌 과소화 추세

그간 농촌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불과 30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5년 농촌인구는 총 8,764천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불과 30년 전인 1975년 농촌인구 17,910천 명의 48.9%에 불과한 수준이다.

변화 속도를 보면 최근 들어 다소 감소폭이 완화되고는 있다. 최근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10년 기간 중 농촌인구 감소율은 7.9%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해 그 이전인 1975년에서 1985년 기간과 1985년에서 1995년 기간에 이르는 각 10년간 농촌인구 감소율은 각각 21.8%, 32.1%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들어 농촌인구의 감소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 큰 폭의 농촌인구 유출이 오랫동안 지속 되어온 결과 이촌 성향을 갖는 잠재자원의 고갈 현상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풀이한다. 이제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아있지 않고 거의 떠났음을 알게 해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표 4〉 기간별 농촌인구 감소율 추이

(단위: %)

구 분		1975~1985년	1985~1995년	1995~2005년
전 국		-21.8	-32.1	-7.9
사례 지역	도시 근교	금산군	-22.4	-33.3
		성주군	-35.3	-25.6
	일반 평야	김제시	-22.8	-32.5
		고창군	-28.5	-38.7
사례 지역	월경 산간	영양군	-35.9	-45.2
		영덕군	-28.8	-33.9

자료: 통계청, 「인구 및 주택 센서스」, 각년

본 연구 사례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사례지역에서도 최근 들어 인구감소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평균치에 비해 사례지역의 경우 감소폭이 전 기간에 걸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5~2005년 기간 중 사례지역의 경우 인구 감소율은 대체로 20% 내외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인구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농촌을 사례지역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서 연유하는

결과로 이해한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도 농촌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든 것임을 말해 주고 있다. 비록 농촌인구 감소추세가 최근 들어 다소 꺾였다 하더라도 줄어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농촌인구기반의 지나친 위축은 농촌지역의 유지 자체를 힘들게 하고, 나아가 국토공간에서 차지하는 농촌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국토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것임은 불문가지이다.

3.2. 농촌기초생활권 단위의 과소화 전망

농촌인구는 정주기반의 본질인 시장수요 기반 그 자체이다. 때문에 앞으로 농촌인구 기반이 어느 정도로 위축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농촌개발 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생각에 입각해서 향후 농촌지역의 기본 정주단위인 기초생활권 차원에서 전개될 농촌인구의 감소 정도를 전망해 봤다. 분석단위인 기초생활권은 통계자료 이용 사정상 현실적으로 행정구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으로 설정하였다.

인구전망은 10년 이후를 상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즉, 현재 2008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향후 10년이 지난 2018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전망하였는데, 전망 방법은 기본적으로 현재인구에다가 향후 10년 사이에 일어날 인구의 자연증감분과 사회적 증감분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는 코호트 생산모형을 적용하였다.⁴⁾

사례지역에서 향후 10년에 일어날 인구기반 변화를 전망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감소 속도가 완화되어 가는 최근의 경향을 이어 가면서도 여

4) 즉, '목표연도 전망인구=현재인구 + 자연증감1)+사회적 증감1)'의 산출공식에 의해 전망하고 있다.

전혀 지속적으로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10년 후에는 현재보다 대개 10~20% 사이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주목할 만한 사실은 입지유형별로 향후 인구감소 패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도시근교 지역의 경우 인구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원격산간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후에 도시근교 사례지역인 금산군과 성주군의 인구감소율은 각각 12.0%, 14.2%로 나타나는데 반해 원격산간 사례지역인 영양군과 영덕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20.5%, 16.6%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평야 사례지역인 김제시와 고창군의 경우는 그 중간수준인 18.5%, 17.5% 감소율을 각각 보이고 있다.

〈표 5〉 사례지역의 인구 전망

지역 유형별 사례 지역		2008년 인구	자연 증가		사회적 증가		2018년 전망인구	기간 중 감소율
			연평균 증가율	증가인구 (향후 10년간)	연평균 순 이동율	증가 인구 (향후 10년간)		
도시 근교	금산군	56,740	-2.47	-1,402	-10.05	-5,425	49,913	12.0%
도시 근교	성주군	45,024	-5.37	-2,373	-9.31	-4,016	38,635	14.2%
일반 평야	김제시	95,807	-2.8	-2,649	-20.37	-17,765	78,042	18.5%
	고창군	60,328	-6.13	-3,580	-12.20	-6,968	49,780	17.5%
원격 산간	영양군	18,766	-7.57	-1,378	-14.02	-2,467	14,921	20.5%
	영덕군	42,707	-6.1	-2,534	-11.19	-4,549	35,624	16.6%

주) 연평균 자연증가율 및 연평균 순이동율은 인구 1,000명 당 증가 및 순이동 인구수로서 2006년, 2007년, 2008년 등 3개년 평균치임.

자료: 통계청, 「시군구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국가통계포털(KOSIS), 각년---, 「국내인구 이동 통계연보」, 각년

3.3. 농촌마을의 과소화 전망

이어서 농촌주민이 삶을 영위해가는 정주 공간 즉, 삶의 터전에서 가장 기본적인 1차적 정주단위를 구성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그 인구기반 변화 전망을 시도하였다.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총체적인 인구기반 변화 분석으로는 농촌주민의 삶의 조건을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정주공간인 마을의 존재 모습을 유추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농촌마을의 변화 모습을 그려보기 위해서는 일반화를 시도하는 통계적 접근보다 사례연구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농촌마을 인구변화 전망 사례마을은 원격농촌지역인 영덕군의 달산면에 위치하는 흥기3리 본 마을로 선정하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문제를 인식하고자 하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인구감소폭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원격산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인구기반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인구 2,000명 미만 면 중에서 사례지역을 선정하였다. 더하여 사례마을은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관심이 농촌의 공동화 문제에 두고 있는 만큼 전망치의 극단적인 편기 현상을 불식시키기 위해 평균치 이상 어느 정도 인구규모를 보이는 마을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정한 사례마을인 흥기 3리 본 마을의 경우 현재 인구수는 총 6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농촌마을 인구는 평균적으로 대개 50명 내외 수준을 보이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공동체 활력이 최소한 평균 정도는 유지되는 일반적 마을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례임을 알려주고 있다.

역시 향후 10년 후를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사례마을의 인구규모를 코

호트 생산모형에 의해 전망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인구에다가 자연증감⁵⁾ 및 사회적 증감⁶⁾을 더하여 산출하였다.

우선 기준연도인 2008년 현재 사례마을의 인구구조를 보면 전체 주민 69명 중에서 27명이 남자이고, 나머지 42명이 여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전까지는 대체로 성비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60세 이후 들어 균형이 크게 흔들리면서 여초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 주민 중에서 여자 비중은 62.5%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사례마을 인구구조의 또 한 특징은 노령화 현상이 뚜렷이 읽힌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 중 60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70%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 이제는 도시로의 인구이동 때문이라기보다는 노령화에 따른 자연감소에 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사례마을을 대상으로 시도한 인구 전망 결과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잘 드러나고 있다. 향후 10년이 지난 2018년까지 고령으로 인한 사망자가 22명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동 기간 중 출생은 겨우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구이동을 고려하지 않으면 2018년에는 사례마을의 주민수가 30% 감소한 48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노령화는 더욱 진행되어 2018년 60세 이상 주민이 38명으로서 전체의 80%를 차지하게 되며, 전체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23명이 80세 이상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도시로의 인구유출 압력이 크게 줄어들었기는 하지만 여전히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 기간 중 사례마을로 유입되는 사람보다 나

5) 여기서는 10세 단위로 연령계급을 설정하고 연령계급별 여성인구수에다가 출산율을 10년 기간 동안 곱하여 출생인구를 도출하고, 마찬가지로 연령계급별 사망률에 기초하여 사망인구를 계산한 다음 출생인구에서 사망인구를 빼서 산출하였다.

6) 사회적 증감은 주민등록상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값으로 산출하는데, 여기서는 자료 한계로 연령별 전출입 인구수를 분석할 수 없어 영덕군 전체 전출·입률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계산하였다.

가는 사람이 8명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의 자연증감에다가 이러한 사회적 증감까지 더하여 분석한 사례마을의 주민 수는 목표연도인 2018년도에 전체 40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10년 기간 중 42%의 높은 인구감소율을 보이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마을의 인구감소 전망 수치는 앞서 본 사례지역 전체로 분석한 인구감소 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농촌주민의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정주공간을 이루는 최하위 정주공간 단위인 마을 차원에서 더욱 심각하게 정주기반이 무너질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6〉 사례마을 인구감소 전망

(단위: 명)

연령별	2008년 인구현황			자연 증감			2018년 인구구조 (자연증감)	인구이동 (사회적 증감)	2018년 전망인구
	남	여	계	출산율	사망율	증감 (향후10년)			
0~ 9세	0	3	3		0.25	1	1		
10~19세	2	1	3		0.3	0	3		
20~29세	1	0	1	54.0	0.6	0	3		
30~39세	1	1	2	53.3	1.05	0	1		
40~49세	1	0	1	1.2	2.65	0	2	-	-
50~59세	4	7	11		5.5	-1	0		
60~69세	4	11	15		12.05	-2	9		
70~79세	12	14	26		34.75	-9	6		
80세이상	2	5	7		147	-10	23		
계	27	42	69			-21	48	-8	40

주 1) 출산율 및 사망률은 인구 1,000명당 비율임.

2) 출산율은 2008년 영덕군, 사망률은 2007년 경상북도의 통계치임.

자료: 통계청, 『2008년 시군구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국가통계포털(KOSIS), ----, 『2007년 인구동태통계연보』, 2008

4. 정책 시사점: 농촌과소화 문제 대응에 역점

4.1. 농촌 문제의 재인식

농촌문제는 산업화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에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은 다분히 대중적인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 농촌인구의 과도한 유출로 개발 잠재력이 거의 고갈되다시피 한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여전히 상투적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내세우면서 미온적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 문제의 근간 즉, 문제의 뿌리는 노령화 문제를 동반하면서 빠르게 과소화가 진행되는 현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농촌 과소화 실태를 보면 면지역의 경우 현재 4,000명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75년에는 대부분의 면 규모가 인구수 10,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심각한 수준에서 농촌공동체가 붕괴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최하위 정주공간인 농촌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마을해체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행정구역 '반' 기준으로 인구규모가 1989년 경우 80명 내외 수준을 보이던 것이 불과 20년이 지난 2008년도에 5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령화 실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75년 노령화 지수 즉, 65세 이상 인구수를 14세 이하 인구수를 나눈 값이 10% 내외로 나타나고 있는데, 30년 만인 2005년에는 그 값이 무려 200% 내외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전제 위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과소화와 노령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농촌문제는 기본적으로 과소화에 따른 시장수요의 위축에서 비롯되는 문제이며, 여기서 여러 가지 문제 파생되고 있다. 농촌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 본질이 파악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농촌인구 감소는 여러 가지 생활 및 생산서비스 공급 임계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역시장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위축되게 하고, 그 결과 많은 서비스 공급활동이 광역 시장권으로 편입됨에 따라 정주여건의 악화가 가속화되기에 이른다. 보다 상위의 중심지까지 더 먼 거리를 내왕하면서 충족해야 하는 생활 편의서비스 예컨대, 시장보기, 병원 진단받기, 학교 가기 등 일상용품 구매 및 의료, 교육환경의 열악 등 문제가 파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농촌인구가 더욱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면 농촌문제의 핵심은 무엇보다 농촌 정주공간이 붕괴되면서 공동화되는 데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농촌마을의 경우 앞서 본 것처럼 향후 10년이 지나면 현재 인구의 42% 정도가 또 줄어들고, 그리고 노령화 정도는 더욱 심화되어 60세 이상이 80%, 80세 이상이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4.2. 농촌정책의 기초

우리 농촌은 과소화와 노령화 문제가 동반되면서 악순환 되는 가운데 10년 이후 농촌마을의 인구는 더욱 더 크게 줄어들 것이고, 노령화 또한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될 것이다.

과소화 및 노령화에 따른 농촌의 공동화 대응문제가 향후 농촌정책의 큰 흐름이 되어야 할 것임을 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여전히 많은 농촌 주민들이 삶을 영위하는 정주공간이며, 나아가 정주선호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상기하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우리 농촌을 이대로 방치하면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과소화와 노령화 문제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구조의 문제이므로 농촌정책의 장에서 효과적인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농촌정책의 딜레마적 성격이 여기서 비롯된다. 한편으로 도시화의 힘에 강하게 종속된 나머지 농촌문제는 날로 심화되면서 정주공간이 붕괴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어서 이러한 모습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상반되는 2가지 현상 사이에 농촌정책의 고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촌정책의 기본 틀은 이러한 배경에서 그 골격이 짜여져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최소한의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면서, 나아가 공동화되고 황폐화되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여하히 되찾게 하느냐 하는 즉,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농촌정책의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다.

4.3. 농촌정책의 기본방향: 농촌지역사회의 효과적인 유지 보존 및 관리 방안 모색

농촌정책의 초점은 농촌공동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두어져야 할 것이다. 현 농촌정책도 큰 틀에서는 이러한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농촌인구기반 유지 및 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산업관련 정책 프로그램을 구사하고 있으며, 시장광역화에 대응하여 소도읍 및 거점면 육성 정책프로그램과 함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도로·교통 관련 정책 프로그램들을 도입하고 있고, 그리고 공적 부조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들이 작동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현행 농촌정책의 안목은 실질적으로 농촌 공동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그다지 절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촌정책 내용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초래될 심각한 농촌공동화 문제에 대

한 우려는 불식한 채 대중적인 차원에서 농촌의 인구기반을 확충하고 활력을 북돋우는 제반 정책프로그램들을 강구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농촌문제에 대한 대응에는 정면에서 비켜선 채 다소 낙관적인 차원에서 우회적으로 여러 정책프로그램들을 강구하고 있다(이병기, 2008). 예컨대, 농촌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미온적 농촌산업 활성화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든지,⁷⁾ 크고 작은 여러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종합적 개발을 추구하는 다양한 '지역종합개발정책 프로그램'이나 단편적인 다양한 생활편익·복지 시책들을 산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⁸⁾

심각한 수준에서 공동화되고 노령화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산발적인 접근으로는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소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위축되어버린 농촌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농촌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농촌인구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농촌의 성장 잠재력이 고갈되어 버려 어떠한 활력 증진 정책프로그램도 의도하는 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농촌현실을 상기하면 농촌정책은 우선 1차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농촌지역사회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정주공간이 붕괴되고, 농촌공동체가 해체되어 가고 있는 농촌 현실에 비추어보면 향후 농촌정책은 마땅히 농촌지역사회의 효과적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해가

7)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신활력지원사업, 복합낙시공원조성사업, 김육성채묘및냉동망보관사업, 특화품목육성사업 등이 2009년 현재 광특회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정책프로그램들로 나타나고 있다.

8) 이러한 범주에 속하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정책프로그램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지방소도읍육성사업, 거점종합개발사업,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살기좋은지역만들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이 그것이다.

는 방향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보다 근본적인 농촌정주대책인 산업관련정책은 또 다른 하나의 농촌정책 범주로 분류하여 다른 차원에서 효과적인 접근방법을 강구해가는 노력 또한 병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농촌소득기회를 확충하는 정책은 농촌개발의 궁극적 수단이자 목표를 이룬다. 때문에 소득제고를 지향하는 다양한 산업적 접근이 농촌정책의 한 갈래로 자리하면서 많은 관심과 함께 실질적이고 전향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진체가 되는 정책분야를 특정하여 드러내자는 것이다.

요컨대, 향후 농촌정책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붕괴되는 농촌지역사회로 하여금 여하히 효과적으로 연착륙을 유도해 가느냐 하는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농촌정책의 기초를 이루는 '농촌 활력 제고' 방향에서의 접근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것은 붕괴되는 많은 농촌지역사회로 하여금 급격한 변화와 충격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미연에 덜어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역사회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5. 결 어

최근 농촌의 과소화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지역사회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우선 농촌 과소화 실태와 특징을 경험적으로 확인해보고, 나아가 향후 전개될 농촌 과소화 실제 모습을 전망하였다.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오랜 기간 누적된 농촌의 과소화 및 노령화로 말미암아 최소한의 공동체 유지가 힘들 정도로

위축되고 있음을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향후 10년 후면 사례 농촌마을의 경우 지금보다도 42% 더 줄어들고, 또 80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농촌의 공동화 문제가 이제 당면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농촌의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는데 농촌정책의 역점을 두어져야 할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지금껏 견지하고 있는 농촌 활성화 방향의 농촌정책 기조는 과소화되고 노령화된 농촌 현실에 비추어 그 적합성과 효과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농촌인구 유출에 따른 농촌 공동화 문제는 산업화와 도시화의 이면에서 겪는 동전의 다른 한 면이다. 농촌만의 한정된 시각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농촌정책의 딜레마적 어려움이 여기서 비롯되고 있다.

제한된 농촌정책 수단으로서는 이러한 흐름을 막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음을 일러주고 있다. 그렇다고 무너져 내리는 농촌을 그냥 바라만 볼 수만은 없다. 어쨌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붕괴되고 해체되고 있는 농촌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미봉적 농촌 활성화 대책을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농촌정책 기조에 안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농촌 공동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응하는 정책적 고민도 보다 심도있고 다각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컨대, 많은 농촌마을들이 해체되는 모습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거듭나게끔 적극적인 농촌 지역사회 유지·관리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지, 또 아니면 급격한 해체 과정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농촌마을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소극적 차원의 농촌지역사회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든지 등등에 대한 정책 안목과 입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9). *농촌정주기반 실태와 개선과제*.
- 박윤희 외. (200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효과 분석*.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성주인 외. (2008). *국토공간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농촌중심지 발전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외. (2006). *살기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윤원근 외. (2005). *정주권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 농림부·농업기반공사.
- 이병기. (2008). *참여정부 농촌개발정책의 회고*. *농촌지도와 개발 제15권 제1호*, 한국농촌지도학회.
- 고영종의 역. (1997). *현대지역이론과 정책*. 한울아카데미.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편저. (2006).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 보성각.
- 윤원근. (2003). *국토정책과 농촌계획*. 보성각.
- 농림수산식품부. (2006). *2006 농림업 주요통계*.
- 통계청. 2006년, 2007년, 2008년 시군구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율. 국가통계포털.
 _____. 2008년 시군구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국가통계포털.
 _____. 2007년 인구동태통계연보. 2008.
 _____. 2006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2007.
 _____. 2007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2008.
 _____. 2008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2009.
- Friedmann, J. and C. Weaver. (1979). *Territory and Function: the Evolution of Regional Planning*. London: Edward Arnol

논문투고일: 2010. 10. 15
 1차수정일: 2010. 12. 5
 게재확정일: 2010. 12. 10